

**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**  
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49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0. 13.

발 의 자 : 김성원 · 김정재 · 이주환  
이종성 · 이 영 · 성일종  
임이자 · 최승재 · 윤창현  
엄태영 · 권명호 · 지성호  
이명수 · 이종배 의원  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3년간 우리나라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6,053명인데, 그중 도로 폭 13m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,019명으로 66.4%나 차지하고 있어 생활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임.

이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「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」을 수립하여 주택·상가 밀집지역 등 일정 도로의 구간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, 지침에 근거하여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실정임.

이에 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

는 것임(안 제12조의3 신설, 제138조의2, 제147조의2제3호 신설).

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3(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또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주택 또는 상가 밀집지역
2. 학교·공원·관공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지역
3.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의 인접 지역
4. 그 밖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

②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활도로구역에서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생활도로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38조의2 본문 중 “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”를 “어린이 보호구역, 제12조의2”로, “장애인 보호구역”을 “장애인 보호구역과 제12조의3에 따른 생활도로구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보호구역에는”을 “보호구역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생활도로구역에는”으로 한다.

제147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12조의3에 따른 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: 2021년 1월 1일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<u>제12조의3(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또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주택 또는 상가 밀집지역</u></li> <li><u>2. 학교·공원·관공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지역</u></li> <li><u>3.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의 인접 지역</u></li> <li><u>4. 그 밖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</u></li> </ol>

	<p><u>②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활도로구역에서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에 따른 생활도로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
<p>제138조의2(비용의 지원)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<u>어린이 보호구역</u> 및 제12조의2에 따른 <u>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</u>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다만, 어린이·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<u>보호구역</u>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38조의2(비용의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<u>어린이 보호구역, 제12조의2----- -----장애인 보호구역과 제12조의3에 따른 생활도로구역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호구역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생활도로구역에는-----</u>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7조의2(규제의 재검토)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</p>	<p>제147조의2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</p>

<p>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폐지,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제12조의3에 따른 생활도로</p> <p><u>구역의 지정 및 관리: 2021년</u></p> <p><u>1월 1일</u></p>
--	--